

2012. 8. 30.

##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21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안 자 일 자	회 부 자 일 자	상 정 자 일 자	의 결 자 일 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 8.28.	2012. 8.28.	2012. 8.30.	2012. 8.30.	경 제 과 장	

## 2. 제안설명요지

법원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결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 점포의 매월 둘째, 네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토요일, 일요일, 전통 장날 중 월 1일 이상 2일이내 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제3항)
- 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되 상생발전에 필요할 경우 조정 가능 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제2항)

다.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예외규정을 삭제함(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 삭제)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휴업이 제외되는 농협마트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 함)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서울행정법원 최초판결, 이후 모든 법원에서 판결 인용)의 판결에 따라 문제가 되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조례의 위법 판결 추진 경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소송관련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일 시	관 련 내 용	비 고
2012. 2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 조례 제정 후 전국 확산(모두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2012. 4월	○충주시의회 조례 제정(2,4제주 일요일 휴무)	최근배 의원 대표발의
2012. 5월	○충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2012. 6월	○서울 강동구,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 및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2 선고 2012구합11676

일 시	관 련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서 제정한 의원발의조례는 구청장이 공의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여 상 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고</li> <li>- 대형마트 등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등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li> </ul>	, 11966 판결
2012. 6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마트 소송 전국적 확산</li> <li>-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조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li> </ul>	
2012.7.23	○충주소재 대형마트 소송 제기(7.2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8월	○충주소재 대형마트 영업 재개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서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조례 무효소송이 최초 제기되어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충주시 소재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7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8월부터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반되어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 한 후 한 달의 여유 시간이 있었음에도 8월 초에 입법예고가 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음.

#### 나. 개정 조례안의 절차 및 내용적인 측면

한국체인스토어(대형마트의 연합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 의무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청주시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 소송을 당하는 등 약간의

절차상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을 경우 대형마트 측에 소송의 빌미를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충청북도(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의 조례 개정권고안을 수용하여 개정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조례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의견

본 의안의 주요 사항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은 지난 4월 제16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의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영업 제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재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금번 개정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대형마트 성격을 띠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대해 농수산물 판매비중을 증명하도록 한 것은 조례 개정취지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 바람직 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의견 대립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고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절차상 하자 등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5. 질의답변 요지

- (1) 질의 :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 용어의 정의가 없는데?

답변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

- (2) 질의 : 대규모 점포의 정의는?

답변 : 매장면적 3,000m<sup>2</sup>이상의 규모임.

- (3) 질의 :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최초 입점시 규제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 영업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완된 사항임.

- (4) 질의 : 영업제한 후 재래시장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는지?

답변 : 상인회에서는 10~20% 매출이 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음.

- (5) 질의 : 편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 상인의식 개혁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6. 심사결과

- ☐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